

## 공정위 알림판

# 공정위 2000년 소비자보호관련 사업계획 수립

## - 각종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등 -

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예산(안)에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비 등으로 480백만원을 반영하였다.

동 사업은 소비자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, 동 사업의 추진으로 광고분야, 약관분야, 전문자격사의 수임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입장과 권익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편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## [주요 사업내용]

### 1.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실태조사

- ▶ 카르텔일괄정리법으로 보수규제가 폐지되어 소비자에게 부당한 보수를 요구할 가능성이나 변호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을 소비자단체를 통해 연간 2회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

### 2. 중요정보공개제 운영을 위한 소비자피해사례 조사

- ▶ 표시·광고법 제4조에 의해 소비자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·광고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는 제도로서 공정위가 정보부족으로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정보를 조사하여 업종별 중요정보를 고시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

### 3. 할부거래계약의 운용 실태조사

- ▶ 할부거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분야에서 할부거래법의 적용실태 및 소비자피해사례를 조사하여 할부거래법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

### 4. 광고실증자료 검증

- ▶ 표시·광고법 제5조에 의해 소비자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표현에 대하여 공정위가 사업자의 실증

## 공정위 약관판

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정위는 실증이 필요한 표시·광고내용을 선정하여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

- ▶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·조사방법의 객관성, 실험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전문가에게 검증

## 5. 방문판매 현황 및 소비자피해사례 조사

- ▶ 업체의 일반현황, 소비자의 피해사례, 판매원에 대한 강제할당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방문판매법의 적용실태 및 소비자피해사례를 조사하여 방문판매법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

## 6. 표시·광고에 대한 소비자오인성 조사

- ▶ 표시·광고의 부당성 판단기준의 하나인 소비자오인성은 입장과 관점에 따라 부당성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소비자오인성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사건심사에 반영
- ▶ 소비자오인성 판단이 어려운 표시·광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의 의미, 인지도 등 소비자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

## 7. 주요거래분야 사용약관 실태조사 및 거래실태 분석

- ▶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주요 약관의 거래분야별, 유형별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약관 규제정책 또는 계약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업종별, 유형별 표준약관을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 구축

## 8. 업종별 부당약관 유형 분석

- ▶ 업종별, 유형별로 주요 부당약관의 유형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약관, 외국기업의 약관 등 신종약관의 부당조항을 분석하여 불공정약관 규제시책 수립에 활용하고, 표준약관보급의 기초자료로 활용

## 9. 표준약관보급 필요분야 선정 및 표준약관 권고안 작성

- ▶ 표준약관 보급 필요분야를 선정하고, 주요 30개 거래분야의 표준약관 권고안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 후 표준약관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

## 10.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

- ▶ 담합은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, 공공건설 공사의 입찰담합은 입찰질서의 파괴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
- ▶ 따라서, 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담합관행의 불식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예산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토록 함